



●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28일 김제시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정성주 김제시장과 함께 청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카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같은 날 시·군 순회방문 일환으로 부안군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권익현 부안군수와 청원과의 만남 시간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제 '담대한 여정, 현재 진행형' 부안 '전북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

시·군 순회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가 임실·진안·군내 이어 이번엔 김제와 부안을 찾았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28일 김관영 도지사의 김제시 방문을 맞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 김제시와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주제로 '시정 속으로', '민생 속으로',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더 깊게 다가서고자 하는 김관영 도지사의 행보에 맞춰 김제시의 주요 현안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로 향하는 김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정성주 김제시장의 적극성이 돋보였다.

김제시는 김관영 도지사에게 2023년 9월에 있을 제9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체육시설 정비 관련 현안과 김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선별시설의 고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시 직원 400여명의 만남에서는 김 지사의 도정 철학에 대한 특강과 격의 없는 질의 답변이 오갔

김관영 도지사, 시·군 순회방문 - 김제·부안

지역 현안 논의·도정 주요 정책 방향 공유

지역별 민생현장 찾아 도민 목소리 청취

며 행사장 천장에서 대형 플래카드가 펼쳐지며 김관영 도지사와 정성주 시장을 선두로 함께 앞장서 나아가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가자는 '다짐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어 미국 코스트코 본격 수출을 계기로 글로벌 회사로 도약한 (주)한우물 등 특화형 비자 시험사업에 관한 건의사항을 듣는 것은 물론 김제시 수출업체 대표들과의 간담에서는 수출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화산업 및 첨단 농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청년이 돌아오고 경제에 생기가 도는 등 변화하고 있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비꾼 김제의 담대한 여정은 현재 진행형으로

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늘 김제시 직원들과 소통·공감의 시간을 갖고 (주)한우물과 김제시 수출업체 대표와의 간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주신 김관영 도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김제시도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위해 전복도와 함께 혁신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부안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부안군 1일 명예군수로 위촉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간부회의에서 부안군은 2022년 부안군이 전북도와 함께한 주요 성과인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을 보고하고 김관영 도지사에게 △해뜰마루 정일 보행교 설치사업 △지방도 703호선 재포장 △지방도 705호선

노선 지정 및 확보장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부안군 직원 450여명과 함께하는 '청원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도정 철학을 전하고,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생생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전북도와 부안군이 한데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후 곱소만 수산농산물 포항금지구역 해제 관련 현장을 방문해 "전라북도과 부안군이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 60년 묵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가 해제돼 지역어업인들이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혁신에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부안군은 새만금 배후도시뿐 아니라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로 커 나가고 있을 만큼 전북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며 "전북도와 부안군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혁신해 나가면서 꼭 함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을 찾아주시는 김관영 도지사에게 군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보다 더 군정에 반영해 보다 특별한 전북도의 혁신과 성공에 부안군이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제=곽대기자·부안=김석진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달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충가 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의 일종으로서 일벌·수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하고 애벌레를 폐사시킨다. 정부는 양봉농가들이 특정 성분이 든 방제제를 오랜 기간 쓰다 보니 내성이 생긴 꿀벌응애는 잘 죽지 않고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폐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꿀벌 활동기인 여름·가을에 꿀벌응애에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꿀벌의 세력이 약해져 결국 월동이 실패하고 개체수의 대량 감축으로 이어져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유엔생물다양성과과학기구(UN IPBES)의 경고도 나온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 작물이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처럼, 꿀벌의 멸종은 식량의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 관련 전염병으로 이미 지정된 나충봉아부해병(제2종)이나 부자병(제3종)처럼 '꿀벌응애'도 법정 가축전염병(제2종)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법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정훈·김철민·김정호·민병덕·위성준·양경숙·이병훈·최종윤·한병도·서영교·민형배·오영환·소병훈·김성환·이원택·김원익·조오섭·장철민·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은=김대환 기자

4·5 전주를 재선거 "가정어린이집 필요경비 만1~2세 유아에게도 지원"

임정업 예비후보

임정업 전주시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올해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원생에게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만 1~2세 유아에게도 지원해 줄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임정업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책발표회를 통해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이 올해부터 1인당 10만원씩 필요경비를 지원받게 된 것은 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원 대상에 만 18개월~2세 영아는 제외돼 학부모와 가정어린이집의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필요경비"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심비 성격의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해 왔다.

임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전북은 0.82명으로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다"라면서 "영양간 예산을 줄여부었다고는 하는데 정작 지원해줘야 할 곳은 의문하고 있다. 이제라도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예산 지원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시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외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0조의2) 특별활동프로그램



지원하고 1~2세는 학부모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들은 18개월부터 특별활동, 체험 등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행보 한 경험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서 "만 3세부터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18개월 이상의 영아들에게도 동일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편성해 전복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의 최일선에서 0~2세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최근 10년 새 절반이 문을 닫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전북도와 도의회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대일외교 저자세 일관 정부 규탄한다"

전북 시민단체가 3·1 운동을 앞두고 현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 외교'라고 지칭하며 날 선 비판을 했다.

3·1독립운동 10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이하 남측)는 전주 중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스스로 뒤엎고,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어 한국 기업에 출연금을 모아 보상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왔다"며 "이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굴복하는 것이자 전범국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공헌한 양극덕 할머니에게 서훈하기로 한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보류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면서 "지난 1월16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천황 생일파티에서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것은 대일외교에서 저자세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뒤로 하고 다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단체는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안보 관련 문서를 개정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했다'고 선언하고, 5년 내에 국방비를 2배로 인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전주시 풍남문광장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3.1 운동 104주년을 맞아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군사협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면서 "일본 방위성은 '능력 행사에 한국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발언하며 유사시 대북전격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도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 날 독도에서는 미국·일본과 함께 해상훈련을 진행했다"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보도자료에 '일본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뉴스



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4명에 사장장 교부

전주시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은 의정실에서 최근 채용 절차를 거친 정책지원관 4명에 대해 사장장을 교부했다.

선발한 정책지원관은 행정위원회 1명, 문화경제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 등 모두 4명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시행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충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이 35명인 전주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인 17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시의회는 "선발하지 않은 행정(1명)과 복지환경(2명), 도시건설(1명) 등 3개 위원회 4명의 정책지원관에 대해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원들의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진 만큼 역량 있는 정책지원관 모집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